

〈서평〉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 진관훈의 『근대제주의 경제변동』(2004, 도서출판 각) -

박 찬 식*

1. 제주사에서의 '근대'

한국 사학계의 일치된 견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사에서는 개항이후 1945년 해방까지를 '근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는 조금 달리 제주 사회에서의 '근대(近代)'의 시점을 일본 잠수기업자들의 제주어장 진출시기인 1870년대부터 4·3이 종결된 195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1870년대 일본잠수기업자들의 제주어장 진출이 제주에서는 실질적인 개항이라고 저자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근대의 종점을 1945년 해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4·3이 실질적으로 종결된 1950년대 초로 잡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저자는 제주사회의 근대는 일본 잠수기업자들의 제주어장 진출시기인 1870년대부터 4·3이 종결된 1950년대 초까지로 잡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사에 있어서의 '근대', 좀더 근본적으로 '제주사 시대구분'에 대한 본격적 논의나 학문적 합의가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저자의 '제주사에 있어서의 근대' 제기는 일단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차후 이를 계기로 '제

* 제주대학교, 역사학 박사

주사 시대구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이 시기를 연구하는 저자의 관점

저자가 설정한 제주사회의 근대시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과정에서 강제로 자본주의적 세계경제체제의 일부로 편입되는, 말하자면 현대사회의 과도기에 해당한다. 특히 일제하 제주사회는 이식자본주의에 의한 식민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기에 해당한다.

저자의 일제하 제주경제 연구의 목적은 일제하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역할과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체계화시키고 그 이후 현재까지 제주사회에 작용하고 있는 유·무형의 식민지 유산들을 되새기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모두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제하 제주사회·경제에 대한 연구가 충분한 검토나 학문적 근거 없이 습관적으로 수탈과 단절로 매몰시켜 버리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당시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시대이기는 하나 제주땅에서 제주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생활하는 시기였다고 강조한다. 즉 식민지기는 일본이 지배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주도민이 생활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라는 의미의 중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인간사회의 변화과정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자가 일제하 제주경제를 연구하면서 '수탈'과 '근대화론'과 같은 2분법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필자의 관심은 그 속에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 제주

도민들의 물질적·비물질적, 가시적·비가시적 성과의 의미를 파악하고 체제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일제하 제주경제의 유산과 경험을 되새기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어쨌든 제주도민들은 그 속을 걸어왔고 현재에 도달한 것이다. 식민지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우리가 현재 어디쯤 와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 『근대제주의 경제변동』 본문 중에서

III. 경제변동

‘수탈’과 ‘근대화론’ 2분법의 오류를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저자는 일제하 제주경제의 변화과정을 ‘경제변동’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일제하 제주경제를 보면 교통의 발달과 도일 증가, 해녀노동, 식민지 경제정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환금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교역과 상업이 활발해 졌으며 소비 행태와 근로의식이 변화하고 현금보유량이 늘어나는 등 주요 경제현상들이 변동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또한 경제지표들의 시계열적 변화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일제하 제주경제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용어는 ‘경제변동’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일제하 한국경제를 표현하는 ‘근대화’, ‘경제성장’, ‘공업화’와 같은 용어에 비해 ‘경제변동’은 가치중립적이며 여러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유용한 서술적 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경제변동’이란 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 의한 한국지배의 부당성이 애매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IV. 각 장별 내용과 과제

1. 제주도 화전

제주경제사의 많은 부분에 키워드를 함축하고 있는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화전은 강원도 등 육지부에 비해 일찍 자취를 감추었는데 이는 일제의 산림령과 같은 화전금지 정책의 탓도 일부 작용하였지만 식민지기 제주도 촌락의 이동과 해촌의 경제적 기회증가, 도일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4·3 을 거치면서 완전히 소멸되어 현재는 행정구역상으로 남아있는 몇 곳의 화전마을만이 있을 뿐이다.

저자도 지적하였지만 향후 제주도 화전에 대한 연구는 이에 대한 사회조사(마을조사)가 많이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까지 화전에 대한 기억이나 간접 경험을 가진 세대들로부터 당시 화전의 농업경영, 농업기술, 화전조성 순서, 관련된 용어와 개념 등을 구술사 정리 방법 등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2. 1930년대 제주농촌 경제변동

1930년대 이후 제주도 농촌은 외부로부터 소득유입으로 현금보유량이 늘어나고 따라서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이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소비지출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외부로부터의 송금 규모, 1930년대 농업생산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 농촌의 현금보유량 변화 측정, 외부와의 교역규모의 변화와 도내 상업활동의 활발한 전개 등을 근거로 하여 소비지출의 증가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론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 제주도 농촌의 소비 지출 증가를 뒷받침하는 소득유입의 문제
-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부족했다는 점
- 내륙지방과의 비교가 더욱 세밀히 이루어 져야 하고 생활수준에 영향을 주는 각 지표들의 상관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 해녀경제 연구

식민지기 제주도 경제는 '해녀노동'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녀노동의 산물인 '해산물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안지역의 부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취락의 이동이 전개된다. 이로 인한 富의 확산, 경제적 기회의 증가는 도내 여유 노동력을 창출하게 되고, 이는 교통의 발달과 함께 해녀출가, 도민의 渡日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 농촌의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나아가 제주도 경제가 윤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해녀연구는 인류학, 사회학, 민속학, 어문학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고 많은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해녀에 대한 연구는 기존 범주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문헌사학·경제사와 같은 인접 학문을 동원한 종합적이고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상업 및 교역 연구

식민지하 제주도 교역의 문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 경제의 생산 기반 확충에 관한 것이다. 일본과의 교역에서 1930년대 이후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수입은 물론 수출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제주경제가 식민지 시장경제에 편입되어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산품 소비

시장으로서 종속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일방적 처지에 놓여있기 보다는 식민지 시장경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일본과의 교역에 있어서 교역 이익을 축적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적 성과를 창출시켜 갔다는 것이다. 향후 보충적 연구에서 이러한 점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계량경제사적 방법론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5. 가내공업 연구

가내공업에 관한 연구에서 흥미 있는 것은 가내공업의 생산주역들이 가지는 주체적 생산역량이다. 즉 가내공업의 전개과정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관찰해보면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처하면서 이를 소득창출의 계기를 승화시켜 가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저자는 당시 제주도 경제 혹은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주체적 역량, 저력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증적 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가장 미흡한 점은 가내공업의 성장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분석이다. 몇 가지 자료에서 가내공업의 다양해지고 규모가 증가하는 측면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나아가서 제주도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1937년 제주도 개발

1937년 제주도개발사업계획은 일본의 이익 즉 군수물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일방적인 중앙 자본의 투입을 통한 특정 작물, 축산물의 집단 경작과 공동작업, 대량 생산 등에 노동력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해

방이후 제주도 산업구조를 허약한 체질로 만들었다고 보인다. 또한 1937년 제주도 개발은 제주도민의 사회적 동의나 자발적 참여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토지나 자본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총독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제주개발주식회사의 설립, 토지의 임의수용 등 제주도민의 경제적 역할이 원천적으로 무시된 점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7년 제주도 개발계획이 제주도개발사에서의 객관적인 자리 매김을 위한 학계의 연구와 토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7. 해방이후 제주경제

해방 직후 제주도 경제는 혼란과 과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기를 통하여 내재되어 온 기본적 생활수준, 경제활동에 대한 의욕, 생산 활동에 대한 의욕과 능력 등으로 그들의 경제활동과 생활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보인다.

미군정은 처음부터 제주도 경제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현상유지, 민생안정 수준의 임시방편적 성격을 가지고 제주도 경제를 운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당시 제주도 사회는 농업이나 공업과 같은 생산 기반의 위축과 곡물 및 각종 물자 부족, 불안정한 사회분위기 등으로 발전을 위한 '생산'과 '축적'과는 거리가 먼 '생존'과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로 인해 4·3이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제주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음 장인 4·3 시기의 경제와 연관시켜 설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8. 4·3 경제 연구

아직 '4·3'의 경제적 원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할 만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자는 '4·3'과 관련된 직·간접적 원인들 중에서 주로, 민·관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경제적 사건들의 진행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또한 4·3을 전후로 한 시기의 미군정 경제정책의 모순과 그로 인한 제주경제의 파행, 제주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도 다루고 있다.

향후 4·3 경제를 체계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방 후 국제경제관계속에서의 한국 원조경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주의적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이라는 시각에서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V. 제주경제사 연구의 방향 : 인식의 재확인과 구술 자료 개발

저자의 노작을 읽으면서 평자는 '일제하 개발'의 의미와 근현대 제주경제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개발'은 20세기 근대화, 자본주의 도입과 직결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본주의 개발은 일제강점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일제하 개발'은 근대화를 가져왔지만, 조선인들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아닌 수탈의 강화로 이해되었다. 식민지체제 하에서는 조선인들이 토지나 자본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배제되었으므로 조선인 자체의 발전 전망을 어둡게 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37년 제주도 개발 계획'을 보면, 중일전쟁 직전 전시체제 수립과 자원 수탈, 총독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른 제주개발주식회사의 설립, 토지의 임의수용 등 현지 제주인의 경제적 역할이 무시되었다.

식민지시기 제주역사가 정당하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지배의 억압 속에서도 치열하게 삶을 영위하며 자기 발전을 도모해나간 제주인의 역할을 잘 조명해야 한다. 항일운동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일본 도항·노동·송금, 해녀들의 육지 물질·돈벌이 등은 식민지 질곡을 뚫고 나간 제주인의 노력과 역정으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개발이 이루어져서 제주인의 삶이 좋아졌다고 경제적 개념으로만 평가할 일이 아닌 것이다. 20세기 후반 박정희식 근대화 개발을 겪었고, 21세기 세계화에 따른 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 경제에서 개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문제는 주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식민지시기 경험에서 보듯이 주체와 알맹이가 빠진 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다는 기본 명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자료의 활용과 인용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 책의 서술을 위해 사용되었던 많은 자료와 일제시대 연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공식자료들은 식민지 정책당국이 만들고 해석한 것들로 그 당시 식민정책의 영향을 받던 구성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공식적인 연성자료(soft data)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발굴·축적하는 일이다.

식민지 당국이 펴낸 공식자료는 아무리 그 해석을 확대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술, 민간인의 기록, 공인들의 회고록, 문학작품, 신문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 비공식자료를 이용하여야만 한다. 비공식 연성 데이터가 양적으로 제약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한 구술에 의한 당시 모습의 재현에 힘써야 한다. 이제 점점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있는 시점에서 구술자료 즉 상황의 체험 속에서 총체적으로 식민지를 경험했던 생생한 자료의 수집·축적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